

광주교대 논문 대필 알선 의혹...시민단체 “고발 예정”

지난해 총장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이 일었던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이번엔 논문 대필 알선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고, 해당 교수는 “논문 편집 수고비와 심사비는 오랜 관행이고, 재료비 등이 포함된 것이며, 대필 알선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8일 광주교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모 학과 대학원생 A씨는 담당 교수 B씨로부터 논문대필 제안을 받은 뒤 지난 2월 600만원을 B교수가 소개해준 모 박사에서 지불했으나, 동료 대학원생들의 만류로 논문 제출을 포기하고 이를 돌려받았다.

A씨는 논문 제출이 아닌 1학기 추가수강 방식에 의한 졸업논문 대체를 원했으나 교수 측이 논문제출 방식의 졸업을 요구하며 대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자 이같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학원생 C씨 등 5명은 지난 1월 B교수로부터 졸업 논문 프로포절(Proposal) 명목으로 각각 53만6000원(총 268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고, 지난 6월에는 4명의 대학

“대학원생 졸업논문 대필 수고비 1000만원 요구받아”
“심사 비용도 수 십 만원씩 각출” 시민단체, 9일 고발
해당 교수 “사실무근...심사비는 관행·재료비도 포함”

원생이 논문 심사 명목으로 일부 심사위원에게 60만원씩 모두 240만원을 각출할 것으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원생은 85만원의 논문심사비를 요구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학원생은 특히 “지난 7월 B교수로부터 5명의 다른 대학원생 졸업논문을 이메일로 건네받고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모든 돈들은 등록금에 포함된 정당한 심사비용 같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 측에 진상조사와 제발 방지 대책 수립, 학교 복

귀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키로 했다.

해당 교수는 강하게 반박했다.

교수는 “몇몇 원생들의 졸업논문에 대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 건 카피걸러를 통한 표절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논문의 질적수준이 떨어진 경우에는 도움(논문 보주기)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도움을 주려는 것을 대필 (알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또 논문심사비와 수고비에 대해선 “학과 특성상 심사작 품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이 필요해 이를 포함시킨 것이고, 심사비는 일종의 관례”라고 밝혔다.

이른바 ‘유령학생’ 논란에 대해선 “아간부와 계열반이 교차수강하다보니 대학원생끼리 서



로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B교수는 지난해 교수 공채 문제와 관련해 해임됐고, “해임은 부당하며”며 현재 교육부 소청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광주교대에서는 지난해 유력 총장 후보가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서 연구부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유나기자

“지역민 제때 진료 못받아” 광주 대형병원장 전공의 복귀 호소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장 공동 성명 발표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앞에서 한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장들이 공동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정종훈 조선대병원

장·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은 8일 공동으로 “지역민들이 제 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복귀를 요청했다.

병원장들은 “미래를 결정 짓는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이 내민 손을 외면하는 것은 투쟁의 과정에 가장 뼈아픈 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지역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디 전공의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환하게 웃는 그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진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아울러 “전공의 등 의료계가 지난달 21일부터 주장한 의료정책 4가지에 대한 제검토를 정부가 한발 물러서며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며 “의료 현장의 진정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 주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 전공의 500여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젊은의사비대위의 단체 행동 중단결정과 별개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승호기자

“나주혁신도시가 부영동?” 시민단체 비판

6개 단체 “쥬부영, 한전공대 부지 기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성토



8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대로변 곳곳에 부영그룹을 성토하거나 비교는 문구의 현수막 70여개가 동시에 내걸렸다.

전남 나주지역 시민단체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체인 광전노협이 부영그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혁신도시 곳곳에 내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나주혁신도시 대로변 곳곳에 “나주혁신도시가 부영동이나, 00의 탈을 쓴 부영은 각성하라!”, “한전공대 부지 제공, 거래인가 기부인가” 등의 부영그룹을 성토하거나 비교는 문구의 현수막 70여개가 동시에 내걸렸다.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주체는 광전노협,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빛가람동 상가번영회, 빛가람청년네트워크,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주지회 등 6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이날 현수막 제철과 동시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쥬부영그룹은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잔여

부지에 공공성을 확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채납 후 남은 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지 35만3586㎡에 28층 아파트 5328가구를 신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히 시비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부영그룹은 이미 혁신도시 내에 7개 필지의 토지를 사들였고 이 중 4개 필지에 아파트를 지은 상태인데 여기에 또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 혁신도시는 가히 혁신도시가 아닌 부영동이라고 할만하다”고 풍자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무리한 사업은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부영그룹이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 변경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6개 단체의 이러한 요구는 부영그룹이 주택용지보다 싸게 사들인 골프장 체육시설 부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만큼 이에 따른 공공성 기여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기동취재본부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